



200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3조원 수준의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일제히 신청·접수하고 있다.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조 7,5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6개 자금 3.0조원으로 운영되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며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누어져 있다.

그밖에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를 유지하며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 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며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술·시장성 등급제(5단계)를 유지하여 기술·시장성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비재무제표(기술성·사업성 등) 위주의 신용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제표 등급이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자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개선자금(1조 7,500억원, 4.9%)은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사업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 접수하고 연간 예산을 상·하반기로 배분하여 집행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하여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대출금리 5.9%)
- 소상공인창업자금(5,100억원, 5.9%)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04년 대비 1,600억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고용안정과 창업의 활성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800억원, 4.9%)은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특허권 또는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중진공 순수 신용대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대출액의 125%이내→폐지) 및 특허기술 등 지원대상기술의 최근 3년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 수출금융자금(700억원, 5.1%)은 수출계약 후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별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과 신용 및 외상거래방식의 수출실적도 고려하여 지원하고 지원한도를 확대(15억원→20억원)한다.
- 중소·벤처창업자금(3,500억원, 4.9%)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800억원)에 한하여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고 지원금액 산정시에도 과거 매출액이 아닌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동화사업자금(2,400억원, 4.9%)은 '04년 대비 600억원을 증액하여 기업간 협력사업이 강화된다.

[출처: 중소기업청]



문의 및 신청·접수기관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서울	02)509-7018/9	경기	031)201-6800/2
충북	043)230-5300	부산·울산	051)601-5111
대전·충남	042)865-6100	전북	063)210-6400
대구·경북	053)626-2601	인천	032)818-8321
경남	055)268-2511	광주·전남	062)360-9109
강원	033)260-1600	제주	064)723-210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769-6602/8	대전·충남	042)866-0114
울산	052)277-3283	부산	051)630-7431/5
충남출장소	041)531-7493/4	강원	033)256-9611/3
대구경북	053)601-5273/9	경기	031)259-7921/9
원주출장소	033)735-3344	인천	032)450-0522/4
경기북부	031)920-6723/6	강릉	033)646-9967/8
광주전남	062)600-3017/9	충북	043)230-6812/4
전북	063)210-9922/4	경남	055)269-5821/4
제주	064)751-2055/7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서울	02)789-9287/789-9297	대구	053)424-6970
강남	02)567-6800	인천	032)438-9080
강동	02)3401-4025	대전	042)483-2993/6
중부	02)754-3591	경기	031)215-1560
부산	051)466-4115	광주	062)361-0630



금년도에 금융 IT예산 2조 9,000억

금융권의 내년도 컴퓨팅 부문 IT 예산은 8,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포함, 모두 2조 9,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금융권을 달궜던 '차세대 시스템' 신규 발주와 함께 바젤 대응 시스템, 비즈니스프로세스재설계(BPR) 시스템 등이 신규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신문이 11개 시중·지방·국책 은행과 12개 주요 보험·증권사 등 총 2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금융IT 전략과 발전방안' 조사에 따르면, 금년 금융IT 부문의 예산(잠정치 포함)은 은행권 2조 1,500억원,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 7,500억원을 합쳐 모두 2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규 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28%인 8,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씨티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면 전체 금융IT 시장규모는 3조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은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대형 은행들이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여전히 금융IT 시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IT의 핵심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기관의 65%가 '바젤Ⅱ 및 리스크관리'를 우선 순위로 꼽아 바젤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세대 사업과 함께 내년도 신규 IT 수요를 이끌 것으로 조사됐다. 또 BPR도 약 50%가 응답, 올해 높아진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각 금융기관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은행권은 '차세대 시스템'과 '총소유비용(TCO) 절감'을, 2금융권은 TCO절감을 가장 높게 선택해 이미 추진된 차세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TCO절감'과 '긴축투자'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눅스 등 개방형 플랫폼 도입과 아웃소싱 추진 등에 대해 은행권은 대부분 검토한 바 없으며 필요하다면 부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2금융권은 67% 정도가 이미 리눅스 채택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중이거나 2~3년 내에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보여 대

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전체의 80%가 넘는 19개사가 전산정보 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금년에 금융기관 전산조직의 재편이 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출처: 전자신문]

올해 달라지는 코스닥 제도

지난해 말 정부가 벤처산업 육성 차원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새해 코스닥시장의 등록 및 운영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1분기 중 퇴출제도 강화와 함께 등록요건 완화·기업혜택 확대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코스닥 IPO를 실시했거나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유의해야 할 부문별 대응 및 활용 전략을 알아본다.

기존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 달하는 수익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엔 예외가 적용된다.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거나 차세대 산업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면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

앞으로 코스닥에 신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에는 당기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 일정 기간 경과 후 순차적으로 환입하는 법인세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주주와 관련해서는 IPO 이후 보호예수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무상증자 제한도 폐지된다.

신규 등록기업의 이점이 많아지는 만큼 비정상적인 경영을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커진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에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이 추가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추가조작·분식회계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코스닥위원회가 질적 심사를 통해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출처: 전자신문]